폭력물 규제: 심의규정과 제재조치 위반에 관한 분석

Regulation of Violence: Violence Standards and Sanction

김유정

수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Yoojung Kim(kimyj33@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해 어떠한 심의가 행해졌는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들 중 내용과 표현이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 및 이에 따른 제재에 초점을 맞춰 폭력성 위반제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디어별에 따른 심의 차별화를 확인하기 위해 미디어별 분석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폭력성 위반에 대해 권고와 주의에 치중되는 제재가 내려져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로 더 많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보다 케이블TV가 더 많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36조를 가장 많이 위반하였다. 그러나 26조, 37조, 38조를 제외한 36조, 39조, 51조 위반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TV에 가장 많이 가해진 제재수위는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 중심어 : | 폭력성 심의 | 폭력성 위반 | 폭력물 | 폭력성 심의규정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violence regulation of television. Television programs that infringed the standards of violence and were sanctioned, were analyzed in terms of broadcasting violence standards and the level of sanction imposed, according to network and cable television. The results show that both network and cable television were mainly imposed on sanction of caution and recommendation. And violation of article 36 was most.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violation of articles 36, 39, 51 between network and cable television.

■ keyword : | Violence Regulation | Television Violence | Violence Standards |

I. 서론

중고등학생들이 연루된 폭력사건들이 연이어 뉴스화되면서 우리나라 사회에 폭력이 만연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폭력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원인분석과 진단이 뒤따랐으며 그런 가운데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도 거론되었다. 폭력이 어느 한 가지

요인과 결부되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 및 가족 요인이나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지적되지만 여기에 덧붙여 방송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텔레비전의 폭력적 내용 및 표현이 문제시 되고 있다.

다매체 다채널시대를 맞이하여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간과 채널들이 확장되면서 지상파를 비롯하여 케이블TV에서 격투프로그램, 주로 범죄를 다루고 있는 미

드프로그램, 심지어 잔혹한 장면을 여과없이 내보내는 일본 만화 등이 많이 편성되면서 폭력장면 및 내용이 증가하고 있어 텔레비전 폭력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선정성과 더불어 폭력성은 지속되어온 사회문제가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 또한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그 이유는 폭력적 내용 노출 후 그 내용을 학습하여 폭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거나 모방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에서 행해지는 범죄 중 상당수가 텔레비전에서 제공되는 폭력적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 폭력적 내용이 학습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텔레비전 폭력에 대한 우려는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미국 의회에서 줄곧 제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제도차원에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폭력적 요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성에 관한 규제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폭력물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관리하는 심의에서는 선정성이 폭력성 보다 더 주의깊게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실제로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모두 폭력성에 대한 심의제재가 선정성보다 훨씬 더 낮게 나타났다. 선정성에 따른 위반은 71.8%인데 비해 폭력성에 대한 심의제재는 21.3%에 불과하였다[1]. 이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들 또한 폭력성보다 선정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2]. 폭력성을 다루는 몇몇 연구들[3][4]이 있으나 이들 연구들은 폭력물에서의 폭력적인 내용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다보니 미디어 폭력물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그러한 문제제기나 사태의 심각성이 폭력성 규제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선정성 못지않게 폭력성의 사회적 영향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텔레비전에서 묘사되고 있는 폭력성이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지상파를 비롯한 케이블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

력적인 내용/표현들에 대한 제재가 어떠한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텔레비전의 폭력적 내용과 표현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모방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폭력성에 대한 제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항목과 기준에 따른 폭력성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객관적인 자료인 방송심의 위반사례 중 폭력성에 관련된 제재(위반사항)를 분석하여 지상파와 케이블TV를 포함한 국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한 제재를 탐색하고자 한다. 분기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지상파와 케이블TV가 전체 폭력성 위반사례에서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TV의 가입률이 전체 가구 의 70%를 상회하고 있어 케이블TV의 영향력이 지상파 못지않기 때문에 지상파와 케이블TV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지상파와 유료방송인 케이블TV는 차별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미디어 차별적인 속성에 따른 차별적인 규제적용이 폭력성 심의에서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상파와 케이블TV를 대상으로 미디어별 분석도 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1. 폭력효과와 폭력성 규제 논의

텔레비전 폭력성에 대한 우려는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보급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텔레비전 속의 폭력이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회폭력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지자[5] 폭력성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텔레비전 폭력성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폭력적 행위 모방과 폭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텔레비전의 폭력성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폭력의 사회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폭력적인 내용과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야기되었다.

텔레비전 폭력성에 대한 규제는 지나친 폭력적 내용이나 표현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폭력물에

대한 노출가능성과 이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폭력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함과 동시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근간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폭력물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어 이에 대한 노출가능성이 높았다. 폭력성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실행된 현황조사에서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방영된 모든 프로그램의 60%가 일정하게 약간의 폭력을 담고 있으며 시청자들은 지상파와 케이블TV의 기본 채널을 통해 주시청시간대에 평균 2-3편의 폭력물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 또한 국내에서도 지상파 주시청시간대에 방영된 606개의 프로그램 중 43.7%가 폭력장면을 포함하고 있었으며[7], 케이블TV 채널 중 30개의 채널의 65개 프로그램에서 폭력행위가 1회 이상 발견되었다[4].

이처럼 텔레비전을 통한 폭력물 노출 가능성이 점쳐짐에 따라 폭력 노출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논의하게 되었다. 텔레비전 폭력물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를 풀어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과 문화계발이론(cultivation theory)이 밑받침이 되었다. 텔레비전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우려되는 바는 시청자들이 폭력적인 내용이나 표현에 노출되었을 경우 그러한 내용이나 표현을 학습하여 부정적인 효과가 유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두라(Bandura)[8]는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시청자들이 폭력장면에 노출될 경우 관찰학습을 통해 폭력행위가 단기적으로 모방되거나 장기적으로 내면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관찰을 통해 학습이 행해질 수 있으므로 미디어를 통해 표현되는 폭력에 대한 관찰만으로도 학습될 수 있다.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폭력내용이나 장면이 만연되어 시청자들이 이를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폭력 그 자체가 사회적 문제이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폭력 노출에 따른 학습의 위험성이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거브너(Gerbner)는 문화계발이론을 통해 학습이 아닌 배양의 의미로 폭력물 노출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설명한다. 문화계발이론에 따르면

매스 미디어는 사회 공동의 가치를 창조하고 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그 구성원들에게 배양시킨다. 즉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상이 시청자들의 뇌리에 심어져 세상을 보는 시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결과 텔레비전을 많이 볼수록 텔레비전이 묘사하는 폭력과 범죄 등이 만연한 사회를 현실 세계로 인식하여 중시청자들은 경시청자들에 비해서 텔레비전이 묘사하는 세계를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9]. 따라서 미디어 폭력물에 많이 노출될 경우 실제 사회를 더 폭력적이고 위험한 곳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시청자의 개인적 속성과 시청행태에 따라 차등적일 수 있으나 텔레비전 폭력물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려는 관련 연구들은 이들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는 폭력성이 폭력의식 및 폭력성향 그리고 모방행동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팩과 컴스톡(Paik & Comstock)[10]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적인 장면, 내용, 묘사 등이 청소년들의 사고, 판단력,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폭력적인 장면, 묘사, 내용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이를 학습하게 되어 인지적인 측면이나 행위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폭력물에 노출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비해 더 공격적인 행위를 표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1]. 이러한 폭력적 행동수위는 폭력물 노출이 많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12]. 이와 더불어 폭력적인 언어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13] 언어적 모방이 행위모방보다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모방되었다[14].

또한 폭력에 대한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이 폭력물에서 보여준 이미지에 상응하는 경향이 있어 현실 세계에 대한 격정과, 불신 그리고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9]. 텔레비전에서 묘사된 폭력은 현실성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거나 과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에 대한 노출로 폭력을 과도하게 인지하여 사회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그 반대로 폭력에 대해 둔감해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이러한 효과는 텔레비전에서 계속해 폭력물을 내보내는 한 지속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텔레비전 폭력물 노출과 시청자의 공격성 간에 실증적으로 의미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15]도 있지만 폭력성에 관한 연구들의 주된 지적은 텔레비전의 폭력물 시청이 어린이와 청소년들 비롯한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렇듯, 폭력물 노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입증되자 이를 토대로 폭력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폭력물에 대한 규제가 행해졌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폭력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폭력성에 대해 규제는 정당화되고 있다[16].

폭력성 규제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표현되고 묘사되는 폭력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폭력의 의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중요하다. 폭력성 규제대상인 폭력은 기본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의 사용을 의미한다. 거브너 등(Gerbner et al)[9]은 폭력을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명백한 신체적 힘의 표현,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다그치는 행위, 혹은 실제로 해치거나 죽이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덧붙여 포터와 워렌(Potter & Warren)[17]은 물리적, 심리적, 감정적 차원에서 해를 가하는 어떠한 행동도 폭력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하승태 등[3]은 폭력에 생물체나 기타 존재집단에게 상해를 가하는 의도로 명백한 위협을 가하거나 힘을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물리적 폭력과 언어를 이용하여 상대를 모욕하고 수치심을 주거나 협박하는 언어적 폭력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정의의 기반으로 실제 심의에 있어서도 폭력을 단순히 물리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심리적, 언어적 폭력 등을 포함하여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2. 폭력성에 대한 심의 규제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 의거하여 좋은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의 책임을 제고시키고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방송심의를 실행하고 있다. 방송심의 업무는 방송내용의 공정성·공공성 유지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권한과 심의규정의 제정 및 공표권을 부여받은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에 의거하여 지상파를 비롯하여 케이블TV 등의 유료방송에서 방영되는 영상물에 대해 폭력성을 심의한다.

방송심의는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된 내용에 따른 등급을 지정하거나 특정 유해하고 문제시되는 내용에 대해 심의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방송심의는 방송규제가 제도적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정부, 공적기구, 시민단체 또는 방송산업이 주체가 되어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달된 내용이나 표현이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18].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

폭력성에 대한 심의는 헌법, 방송법, 방송심의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방지와 방송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10조와 헌법 제21조 제4항은 폭력성 규제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된다. 폭력성 심의는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인 건전성 심의와 관련되며 이는 방송법 제5조에 방송의 공적 책임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방송법 제33조에 의거해 심의위원회는 폭력성과 관련하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인권존중,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심의규정을 제정하여 심의에 적용하고 있다.

폭력성 규제를 위한 방송에 대한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은 방송법 제33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위임명령이며, 제33조에 제시된 규정을 구체화하여 이를 집행할 근거를 설정하는 집행명령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19]. 폭력성 심의에 해당되는 건전성은 심의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 책임) 2항에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방송은 ‘건전한 생활기풍 조성’(제28조)과 ‘사회통합’(제29조)에 이바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제43조)고 명시되어 있어 건전성은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건전성은 방송심의의 핵심적인 개념이며 하위항목으로 선정성, 폭력성, 바른 언어사용이 있다.

폭력성 규제는 심의규정의 제4절 윤리적 수준의 제26조(생명의 존중)와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의 제36조(폭력묘사), 제37조(충격·혐오감), 제38조(범죄 및 약물 묘사)에 해당된다. 제26조는 생명을 중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살인 고문, 사형과 인신매매, 유괴, 매춘, 성폭력, 노인·어린이 학대 등에서 폭력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36조는 과도한 폭력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묘사되거나 스포츠·게임 등을 통해 전달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37조는 충격·혐오감을 줄 수 있는 참수, 교수, 절단, 자살, 살상, 신체 훼손, 시신 훼손, 동물 살상, 범죄 묘사, 흉기를 사용한 살상 등과 관련된 표현에 신중을 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38조는 범죄를 묘사함에 있어 내용, 사용흥기, 약물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금하고 있다. 제39조에는 범죄에 대한 재연이 실제 상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43조와 제44조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유익한 환경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51조에 방송이 바른 언어생활을 이바지하기 위해 비속어, 은어, 유행어 등에 주의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폭력성에 대한 심의는 일정한 심의과정을 걸쳐게 된다. 모니터링과정이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상정된 폭력성 관련 안전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표현에서의 폭력성을 검토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폭력성에 관한 심의는 폭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묘사가 지나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폭력성의 지나친 정도에 따라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방송법 제100조). 심의규정 제60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방송법

제100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취할 수 있다[20]. 또한 제65조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는 사업자가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권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의와 경고는 소극적인 제재의 의미로 권고는 적극적인 권유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지상파를 비롯한 케이블TV 등이 심의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디어별 특성에 따른 차별성이 고려되고 있다. 방송법 제32조에 방송의 미디어별 또는 채널별 특성을 고려해 심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디어별 특성에 따른 차별성을 고려하여 심의결과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규정은 법리적 적용에는 미디어별 특성에 관계없이 적용하지만 심의과정에서 미디어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재수위만 달리할 수 있다[21].

III. 연구문제와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성에 대한 심의 제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폭력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위반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폭력성 위반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들의 폭력성 위반으로 받은 심의제재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방송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에 대해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즉 방송내용 중의 위반사항을 방송 또는 유통된 후에 심의 의결한다. 이 과정에서 방송이 행해야 하는 공적 책임 준수와 관련하여 지정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를 가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지나친 폭력을 전달함으로써 폭력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따라서 폭력성에 대한 심의제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심의규정

을 위반하는지 지와 그에 따른 어떠한 제재를 받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미디어 차별적인 규제적용에 따라 지상파와 케이블TV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차별을 두어왔다. 미디어별 차별화를 명시된 방송법 제32조를 고려하여 심의과정에서 미디어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폭력성 심의제재에 있어서의 미디어별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상파와 케이블TV의 심의제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폭력성에 대한 방송 심의 위반사례의 위반 심의규정과 제재수위를 파악하고 이를 미디어별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폭력성 위반으로 심의제재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들은 어떤 제재를 받았으며 이는 미디어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2: 폭력성 위반으로 심의제재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들은 폭력성 관련 어떤 심의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미디어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3: 폭력성 위반으로 심의제재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들의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떤 특성을 보이며 이는 미디어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2. 분석 자료 수집과정

본 연구는 폭력성 위반으로 심의제재를 받은 위반사례를 통해 폭력성에 대한 제재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후 최근 5년 6개월간(2008년-2013년 6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들의 내용과 표현이 폭력성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심의사례집을 다운받아 수집하였다. 심의위원회는 각 년도 및 월별 심의사례집에 위반사례들에 대한 심의의결사항, 심의의결내용, 적용조항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심의사례의 자료수집 및 정리는 2013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였으

며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한 내용분석유무를 마련한 후 실행된 분석 및 코딩화 작업은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일 동안 연구자와 연구자로부터 훈련받은 1명의 코더가 실시했다. 이들 코더간의 신뢰도는 .94이었다.

3. 심의관련 분석 유목

심의규정은 방송심의규정 중 폭력성 규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방송심의규정 26조(생명의 존중), 36조(폭력 묘사), 37조(충격, 혐오감), 38조(범죄 및 약물묘사), 39조(재연기법), 51조(방송언어)가 적용되었다.

제재수위는 폭력성 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수위를 의미한다. 심의위원회는 폭력성 위반사례를 심의한 후 심의결과 방송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의 제재조치를 명하는 심의절차를 걸친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은 이 중에서 권고, 주의, 경고, 프로그램의 중지,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수위를 적용하였다.

4. 통계처리

내용분석한 자료는 설정한 연구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교차분석, 다중응답분석의 통계처리를 하였다. 특히 다중응답분석은 다중측정을 분석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IV. 분석결과

1. 폭력성 위반사례의 심의 제재 분석

2008년에서 2013년 상반기에 이르는 지상파와 케이블TV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한 심의제재 건수 및 제재수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폭력성에 대한 심의 제재 건수는 2008년의 28건에서 2009년 37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10년부터 감소하였으나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5년에서 2010년까지 심의 위반사례를 분석한 심미선 등[1]의 연구에서 선정성 위반 540건, 폭력성 위반 160으로 폭력성 위반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된 것처럼 본 연구 분석에도 폭력성

위반건수는 많지 않았다.

폭력성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살펴보면 행정지도에 해당되는 권고는 29.7%였으며 법정제재 조치를 받는 주의 이상은 3분의 2를 초과한 70.3%였다. 법정제재 중 주의가 가장 많았으며 경고도 약 24%되지만 프로그램 중지와 시청자사과의 중징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폭력성 위반에 대한 제재는 권고와 주의(62.7%)에 치중되어 있어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로 더 많이 의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폭력성 위반에 대한 심의제재 현황(단위 건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권고	10 (35.7)	5 (13.5)	10 (33.3)	7 (28.0)	13 (38.2)	9 (32.1)	54 (29.7)
주의	3 (5.1)	16 (43.2)	11 (36.7)	6 (24.0)	11 (32.4)	12 (42.9)	59 (32.4)
경고	10 (35.7)	10 (27.0)	5 (16.7)	3 (12.0)	9 (26.5)	7 (25.0)	44 (24.2)
프로그램 중지	1 (3.6)	2 (5.4)	3 (10.0)				6 (3.3)
시청자사 과	4 (14.3)	4 (10.8)	1 (3.3)	9 (36.0)	1 (2.9)		19 (10.4)
합계	28 (100)	37 (100)	30 (100)	25 (100)	34 (100)	28 (100)	182 (100)

()는 column percent.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내려진 제재가 상이한 미디어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폭력성 심의위반 건수는 지상파가 55건, 케이블TV가 127건으로 케이블TV에서의 폭력위반이 지상파보다 거의 2.3배 많았다.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주의를 가장 많이 받았고 그 다음이 권고, 경고의 순이었다. 그러나 행정조치인 권고는 지상파는 36.4%, 케이블TV는 26.8%에 해당되고 지상파에 경징계가 더 많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제재인 주의 이상은 케이블TV에 더 많이 가해졌다. 주의와 경고를 합쳐 볼 때 지상파와 케이블TV 간의 차이는 미비하지만 지상파가 더 많았다. 또한 케이블TV(12.6%)가 지상파(5.5%) 보다 시청자사과를 더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중지는 케이블TV에만 적용하여 케이블TV가 더 많은 중징계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지상파에 비해 채널수가 많은 케이블TV에서 폭력물

이 더 많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케이블TV에서 폭력성 위반이 더 많이 지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반에 대한 행해지는 제재수위에서 지상파와 케이블TV 간의 차이가 있지만 케이블TV가 더 많은 중징계를 받은 양상이 나타났다.

표 2. 미디어별 폭력성 위반 심의제재(단위 건수)

	지상파	케이블TV	합계
권고	20(36.4)	34(26.8)	54(29.7)
주의	21(38.1)	38(29.9)	59(32.4)
경고	11(20.0)	33(26.0)	44(24.2)
프로그램중지		6(4.7)	6(3.3)
시청자사과	3(5.5)	16(12.6)	19(10.4)
합계	55(100)	127(100)	182(100)

()는 column percent.

2. 폭력성 위반사례들의 심의규정 위반 분석

폭력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이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 중 어떠한 심의규정을 위반하였으며 그러한 심의규정 위반을 미디어별로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폭력성 위반사례들은 36조(폭력묘사, 34.1%)를 가장 많이 위반하였으며 그 다음 37조(충격·혐오감, 25.6%), 51조(언어적 폭력, 19.8%)의 순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8조(범죄 및 약물묘사, 8.9%), 39조(재연, 7.8%), 26조(생명의 존중, 3.9%) 위반은 10% 미만으로 적었다. 그러나 범죄 및 약물묘사에 관한 38조와 범죄 관련 재연에 관한 39조를 위반한 건수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6조는 폭력묘사에 관한 조항으로 폭력성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다 보니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26조는 생명의 존중과 관련하여 살인, 고문, 인신매매 등의 가학적으로 잔학한 폭력에 대한 조항으로 가학적으로 잔학한 폭력묘사나 표현으로 인한 위반이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심의규정 위반을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의 경우 36조와 51조를 가장 많이 위반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7조였고 이들 규정 위반이 약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29조, 38조, 26조 위반은 10% 미만이였다. 케이블TV의 경우 36조를 가장 많이 위반하였지만 그 다음이 37조, 51조였다. 37조 위반은 지상파보다 거의 두배

많지만 51조 위반은 지상파보다 거의 2배정도 적었다. 또한 건수는 미비하지만 지상파와 케이블TV 간의 29조와 38조 위반의 순위가 달랐으며 26조 위반은 케이블TV가 거의 2배로 적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폭력묘사에 관한 36조를 가장 많이 위반하였지만 그 외의 폭력성 심의규정에 관한 위반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미디어별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
(중복코딩, 단위 건수)

	지상파	케이블TV	합계
26조	5(6.9)	5(2.7)	10(3.9)
36조	21(29.2)	67(36.0)	88(34.1)
37조	12(16.7)	54(29.0)	66(25.6)
38조	6(8.3)	17(9.2)	23(8.9)
29조	7(9.7)	13(7.0)	20(7.8)
51조	21(29.2)	30(16.1)	51(19.8)
합계	72(100)	186(100)	258(100)

()는 column percent.

3. 폭력성 위반사례들의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심의제재 분석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보고된 폭력성 위반사례들의 위반 조항과 제재수위를 미디어별로 교차분석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6조(생명의 존중) 위반 건수는 전체 위반 건수 중 5%미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동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의 절반정도(55.6%)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그 외는 주의와 경고를 받았다. 36조(폭력묘사)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37.2%), 권고(25.6%), 경고(19.8%) 순으로 제재가 많이 결정되었지만 시청자사과를 받은 건수도 14% 있었다. 37조(충격·혐오감) 위반은 권고(34.8%), 주의(30.3%), 경고(25.8%)의 순으로 많이 제재되어 절반이상이 권고와 주의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및 약물에 관한 38조를 위반한 사례는 권고와 주의가 과반수이지만 경고, 프로그램중지, 시청자사과의 비율도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재연 기법에 관한 규정인 39조를 위반사례들은 경고(45%)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권고와 주의를 받았다. 언어적 폭력으로 51조를 위반한 사례는 주의(35.4%), 경고(27.1%), 권고(18.8%), 시청자사과(14.6%)

의 순으로 제재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26조, 37조, 38조를 위반한 사례들은 권고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그 외 36조, 39조, 50조를 위반한 사례들은 주의와 경고를 많이 받았다. 또한 36조, 38조, 51조를 위반한 사례들 중 10%이상이 시청자사과의 징계를 받았다. 상대적으로 위반사례가 많은 36조와 37조의 경우, 36조는 주의와 권고의 순으로 제재가 가해졌으며 37조는 권고와 주의 순이지만 차이는 거의 없었다. 위반건수가 적은 26조와 39조 위반사례들은 권고, 주의, 경고에 몰려있으며 38조 위반사례들은 모든 제재 유형에 분포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에 대한 제재는 주의, 권고, 경고의 순으로 제재가 많이 의결되었지만 제재수위가 권고, 주의, 경고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36조의 경우 지상파에 대한 제재가 권고, 주의, 경고의 순으로 많은 반면에 케이블TV는 주의, 권고, 시청자사과, 경고, 프로그램중지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케이블TV의 경우 지상파에 없는 시청자사과가 18.5%를 차지하였다. 37조 위반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권고를 가장 많이 받았고 그 다음으로 주의, 시청자사과를 받았다. 그러나 케이블TV에서는 경고가 주의와 같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51조 위반의 경우, 지상파에 대한 제재는 주의가 52.4%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고, 권고, 시청자사과의 순이었다. 반면에 케이블TV는 경고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권고, 주의, 시청자사과를 받은 건수는 동일하였다. 그 외에 38조 위반에 대해 지상파는 권고와 경고를 동일하게 많이 받은 반면에 케이블TV는 권고와 주의를 동일하게 가장 많이 받았다. 39조 위반에 대해서 지상파는 거의 절반이 권고를 받은 반면에 케이블TV는 거의 절반이 경고를 받았다. 26조 위반의 경우 지상파와 케이블TV는 모두 권고를 가장 많이 받았지만 케이블TV의 경우 경고도 가장 많았지만 위반건수가 미비하였다.

26조, 37조, 38조를 제외한 36조, 39조, 51조 위반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TV에 가장 많이 행해진 제재수위는 상이하였다. 26조, 37조, 38조 위반에 대해서는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권고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그

외의 규정위반에 대해서 지상파보다 케이블TV에 대한 제재수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26조, 37조, 38조 위반에 대한 지상파와 케이블TV에 가장 많이 내려진 제재수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37조의 경우 지상파는 권고가 41.7%인 반면에 케이블TV는 권고는 33.3%이며 주의이상이 약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36조의 경우, 지상파는 행정조치인 권고가 38.1%이지만 케이블TV는 권고는 21.5%이며 그 외는 법정제재를 받았다. 39조 위반의 경우 지상파는 권고가 42.9%를 차지하였지만 케이블TV는 경고가 절반이상인 58.8%를 차지하였고 권고는 15.4%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한 규정 위반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TV에 내려진 제재수위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미디어별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심의제재 (중복 코딩, 단위 건수)¹⁾

	26조		36조		37조	
	지상파	케이블	지상파	케이블	지상파	케이블
권고	3 (75.0)	2 (40.0)	8 (38.1)	14 (21.5)	5 (41.7)	18 (33.3)
주의	1 (25.0)	1 (20.0)	7 (33.3)	25 (38.5)	4 (33.3)	16 (29.6)
경고		2 (40.0)	6 (28.6)	11 (16.9)	1 (8.3)	16 (29.6)
프로그램 중지				3 (4.6)		1 (1.9)
시청자 사과				12 (18.5)	2 (19.7)	3 (5.6)
합계	4	5	21	65	12	54
	9(100)		86(100)		66(100)	

38조		39조		51조		합계
지상파	케이블	지상파	케이블	지상파	케이블	
2 (33.3)	5 (29.4)	3 (42.9)	2 (15.4)	3 (14.3)	6 (22.2)	71 (28.2)
1 (16.7)	5 (29.4)	2 (28.6)	3 (23.1)	11 (52.4)	6 (22.2)	82 (32.5)
2 (33.3)	1 (5.9)	2 (28.6)	7 (53.8)	6 (28.6)	7 (25.9)	61 (24.2)
	3 (17.6)				2 (7.4)	9 (3.6)
1 (16.7)	3 (17.6)		1 (7.7)	1 (4.8)	6 (22.2)	29 (11.5)
6	17	7	13	21	27	252 (100)
23(100)		20(100)		48(100)		

()는 column percent.

1) [표 3]과 [표 4]의 단위건수가 차이나는 것은 [표 4]의 제재수위 분석이 권고, 주의, 경고, 프로그램 중지, 시청자사과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V. 결론 및 논의

그동안 미디어 폭력물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폭력성의 사회적 영향을 감안하여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폭력성 심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와 케이블TV를 대상으로 폭력성 위반에 대한 심의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폭력성 심의제재에 있어서 지상파와 케이블TV의 차별적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최근 5년 6개월간(2008년-2013년 상반기)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들 중 내용과 표현이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조항 및 위반조항에 따른 제재에 초점을 맞춰 폭력성 위반제재를 분석하고 이를 미디어별로 파악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폭력성을 위반하여 심의제재를 받은 건수는 총 182건이며 이에 대한 제재는 권고와 주의가 62.7%로 과반이상을 차지하였다. 권고는 행정조치이며 주의 이상이 법정제재에 해당된다. 물론 주의가 법정제재이지만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이므로 폭력성 위반사례의 절반 이상이 권고와 주의를 받았다는 것은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로 더 많이 처리되었음을 의미한다.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케이블TV에서의 폭력위반이 지상파보다 거의 2.3배 많았다. 폭력성 위반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케이블TV가 지상파보다 더 많은 중징계를 받았다. 제공되는 채널수가 더 많은 케이블TV에서 폭력물이 더 많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케이블TV에서 폭력성 위반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케이블TV가 더 많은 중징계의 제재조치를 받은 것은 케이블TV에서 지상파에서 방영 또는 허용되는 수위를 넘어선 폭력물이 제공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폭력성 위반사례들은 36조(폭력묘사)를 가장 많이 위반하였으며 그 다음 37조(충격·협오감), 51조(언어적 폭력)의 순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8조(범죄 및 약물묘사), 39조(범죄의 재연), 26조(생명의 존중)위반은 미비하였다. 36조는 폭력묘사에 관한 조항

으로 폭력성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다 보니 가장 위반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폭력성 위반사례들의 약 절반이 36조와 37조를 위반하였다. 폭력물 특성 상 폭력 관련 표현이나 묘사가 제시될 수밖에 없으므로 36조와 37조의 위반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폭력물에 있어 36조와 37조에 대한 위반을 방송사 자체 심의과정에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는 달리 38조는 폭력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이나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마약류 등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전에 자체 심의를 걸쳐 좀 더 명백하게 처리할 수 있어 위반건수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폭력묘사에 관한 36조를 가장 많이 위반하였지만 그 외의 폭력성 심의규정 위반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37조와 51조 위반도 많았지만 순위는 달랐다. 케이블TV의 37조 위반은 지상파보다 거의 두배 많았지만 51조 위반은 지상파보다 거의 2배정도 적었다. 이는 케이블TV는 지상파 보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다루는 소재에 대한 제한도 완화되어 있어 더 노골적인 폭력이 허용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언어적 폭력 위반이 케이블TV에 비해 지상파에서 더 많이 지적된 것은 방송언어에 대한 규제가 케이블TV 보다 지상파에 더 엄격하게 적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폭력성 위반사례들의 위반 조항에 따른 제재의결을 보면 전반적으로 26조, 37조, 38조 위반사례들은 권고를 가장 많이 받았으나 37조와 38조 위반사례들은 권고와 주의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 외의 36조, 39조, 51조 위반에 대한 제재는 주의와 경고에 치중되어 있었다. 또한 36조, 38조, 51조 위반사례들 중 10%이상이 시청자사과라는 최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36조는 과도한 폭력 전반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위반건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제재조치에서도 중징계가 많이 내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38조에 해당되는 흉기, 약물이나 51조의 언어는 프로그램 내용에서 명확하게 파악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력도 분명하게 점쳐질 수 있어 이에 준한 제재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39조의 경우 거의 절반

이 경고로 의결되어 다른 조항에 비해 제재수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재연의 경우 폭력성이 높은 사례를 재연하거나 일부 내용을 자극적으로 부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폭력성 위반에 대한 제재는 주의, 권고, 경고의 순으로 많이 의결되었으며 그 결과 제재가 권고, 주의, 경고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규정조항에 따른 제재정도에 있어서의 차별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26조, 37조, 38조를 제외한 36조, 39조, 51조 위반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TV에 가장 많이 행해진 제재수위는 상이하였다. 26조, 37조, 38조 위반에 대해서는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권고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그 외의 규정위반에 대해서 지상파보다 케이블TV에 대한 제재수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26조, 37조, 38조 위반의 경우 두 방송에게 가장 많이 내려진 제재수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차지하는 비중에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동일한 규정 위반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TV에 내려진 제재수위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폭력성 위반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에 관한 제재는 전반적으로 경고이상의 중징계보다는 경징계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중징계에 해당되는 수위가 높은 폭력적인 표현이나 장면이 많이 지적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방영 전에 행해지는 방송사의 폭력성 자율심의 과정에서 폭력수위가 높은 노골적인 폭력은 쉽게 파악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위반제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정도가 약한 폭력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경징계에 해당되는 위반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폭력성 위반 제재가 경징계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폭력에 대해 둔감하거나 관대한 제재가 가해진 결과일 수도 있다. 사소한 폭력일지라도 폭력은 유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폭력적인 표현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행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폭력성 위반사례에 대처할 수 있는 심의기준 마련도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방송의 폭력성에 초점을 맞춰 심의제재를 살펴보았다. 결과를 도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폭력성 위반사례에 대한 심의제재를 분석함에 있어 큰 폭의 차등적인 결과가 제시되지 않아 분석한 심의규정 간, 미디어 간의 차이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 논의의 한계가 있다. 좀 더 명확한 심의제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의사례집에 대한 내용분석과 더불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병행된다면 더 유용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성에 치중되어 온 심의 연구에 폭력성 연구는 심의관련 논의에 주요 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심미선, 박은희, 김경희, “방송심의 위반사례 살펴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정성 및 폭력성 현황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5권, 제5호, pp.159-204, 2011.
- [2] 김경희, 심미선, 박은희,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정성 심의기준에 대한 수용자 인식 연구”, 방송통신연구, 2012년 봄호, pp.109-135, 2012.
- [3] 하승태, 민영, 김창숙, “주시청시간대 지상파 텔레비전의 폭력성 연구: 폭력의 맥락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1권, 제6호, pp.317-345, 2007.
- [4] 이정교, 서영남, 최수진, “케이블텔레비전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관한 연구: 폭력묘사의 양과 유형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2007년 겨울호, pp.249-282, 2007.
- [5] R. Huesmann, J. Moï-Titus, C. Podolski, and L. Eron,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children’s exposure to TV violence and their aggressive and violent behavior in young adulthood: 1977-1992,”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9, No.2, pp.201-221, 2003.
- [6] National Television Violence Study, Sage, 1996.
- [7] 민영, 이정교, 김태용, “주시청시간대 지상파 텔레비전의 폭력성 연구: 폭력의 양과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5호, pp.84-124, 2007.
- [8] A. Bandura,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6.
- [9] G. Gerbner, M. Morgan, and N. Signorielli, “Growing up with television: The cultivation perspective,” In J. Bryant and D. Zillmann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4.
- [10] H. Paik and G. Comstock, “The effects of television violence on antisocial behavior: A meta-analysis,” *Communication Research*, Vol.21, No.4, pp.516-546, 1994.
- [11] C. Anderson and B. Bushman, “The effects of media violence on society,” *Science*, No.295, pp.2377-2378, 2002.
- [12] W. Belson, *Television Violence and Adolescent Boy*, Westmead, UK: Saxon House, Teakfield Ltd, 1978.
- [13] B. Kaye and B. Saposky, “Offensive language in prime-time television: Four years after television age and content ratings,” *J.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48, No.4, pp.554-569, 2004.
- [14] W. Potter, *The 11 Myths of Media Violence*, Thousand Oaks, CA: Sage, 2003.
- [15] J. Freedman, “Effect of television violence on aggressiveness,” *Psychological Bulletin*, Vol.96, No.2, pp.227-246, 1984.
- [16] R. Wiley and J. Secrest, “Recent developments in program content regulation,”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Vol.57, No.2, Article 10, 2005.
- [17] W. Potter and R. Warren, “Humor as

- camouflage of televised violence," J. of Communication, Vol.48, No.2, pp.40-58, 1998
- [18] 조연하, 배진아, "매체 자율등급심의 모델의 유형화: 방송, 영화, 비디오, 게임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2005년 겨울호, pp.287-317, 2005.
- [19] 오준근, "방송위원회의 주의경고 및 권고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방송연구, 2004년 겨울호, pp.227-250, 2004.
- [20] 박천일, 주정민, 이영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송콘텐츠 심의를 위한 DB시스템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8-18, 2013.
- [21] 이영주, 채정화, "지상파 방송 심의규제의 적합성에 대한 고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집행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2권, 제3호, pp.298-321, 2008.

저 자 소 개

김 유 정(Yoojung Kim)

정회원

- 198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학사)
 - 1984년 2월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석사)
 - 1994년 4월 :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수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뉴미디어 콘텐츠, 멀티미디어 콘텐츠, 콘텐츠 정책